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 문화산업 · 친환경산악관광진흥

# 전북 문화관광산업, 새 도전 시작

## K-문화도시, 특례 더해 창의적 산업진흥기반 구축 규제 완화 특례 활용 친환경 산악관광으로 경제 활력

지난 4월 26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한지 100일이 지나고 있다. 1월 18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자 전북이 잘하는 일들과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먼저 시도하고 도전하겠다는 특례를 담아냈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은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가동 준비를 마쳐야 한다. 100일을 맞아 4대 특화산업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농생명산업에 이어 이번에는 문화관광산업의 준비상황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등 특례를 활용하여 지역의 핵심역량인 문화·관광자원을 융합·연계하여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문화·관광산업 진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성장 산업은 단연 문화·관광산업이다. 문화·관광산업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에 있어 월등하기에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발판 삼아 글로벌 문화 거점지역으로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역에 특화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지원기관이 설립·지정돼야 할 예정으로 기업 유치와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또한 중요한 구성 요소로 도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산업에 필요한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과 전문인력을 균형적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군을 중심으로 부지조성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 등이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전북자치도는 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전폭 지원하게 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육성 방안, 추진 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5월 중 시군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게 문화산업진흥지구 준비하고, 지구 후보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등 문화산업진흥지구 연할 신청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올해 연말 전북자치도 문화산업의 초석이 될 자치법규를 제정해 특례 실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를 완화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통해 산업을 75%가 넘는 전북자치도의 동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전북자치도는 밝혔다.

특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대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의 개발 방향과 사업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을 수립 후 산악관광사업 시행자 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지난 1월부터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시행령과 도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법 시행 이전까지 수립하고, 법 시행 후에는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5년 6월 정도 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핵심은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에 있다. 지구가 지정되면 산장호텔, 리조트, 숲속야영장, 산악레포츠시설, 쉼터, 일반음식점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산림치유와 휴양, 모험과 체험 등 산악관광을 위한 다양한 시설 도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도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산악지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 도입에 따른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홍보하여 민간 개발 참여를 한층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생산 및 고용확대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남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문화의 핵심가치가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전북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며 체류형 관광객 증대로 인구소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의료개혁 국민 대타협위 구성해야”  
이석현 새미래 비대위원장



이석현 새로운 미래 비생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새미래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한 것은 만사지단이지만 대행”이라며 “하지만 정작 의료개혁특위 의제에 의해 중원 문제가 빠지면서 김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의사단체까지 불참하면서 ‘양꼬없는 전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에게 호소한다. 강대강 대치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우선 협상테이블에 앉아 ‘의료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제 의대정원과 의료개혁 과제는 정부와 의사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 되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장기화한 의료대란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집단 파업하자, 당시 정부여당은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사태를 해결한 바 있다”며 “새로운미래는 의료개혁을 위한 5개 중재안을 이미 제안한 바도 있지만, 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현안 반영 요청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전북 현안 법안 및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은 김관영 도지사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尹-李 영수회담, 구체적 성과 없었다

(윤석열-이재명)

### ‘尹, 소통 이미지 강화 · 李, 야당 대표 위상 부각’ 관측도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에 기존 입장 고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에 나섰지만 합의문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치적 성과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 700여일만에 이뤄진 첫 영수회담에서 불통 대신 소통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위상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130분 가량 첫 영수회담을 했다. 회담은 13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각 취임한 뒤 성사된 첫 회담이자, 4·10 총선 19일 만에 민담이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고 발언하기 보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공식-비공식회의에서 발언권을 독점하고 참모의 조언을 듣지 않

는다는 ‘불통’ 이미지를 가져왔던 것과는 결이 다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여야정 3자 회동 등 향후 대화를 이어가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첫 영수회담에 대해 답답함과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소통의 첫발을 열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15분에 걸친 모두발언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시면 좋겠다”며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고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족주변인사 의혹 정리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결단하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지만 여야정 민생협의체 방식으로는 신속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

고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과 대어 투쟁 선명성 등을 놓고 유무형의 경쟁을 벌여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 대표의 영수회담과 작심 발언은 아련 지지자들에게 배어온 대표주자로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으로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쥔 제1야당 대표 위상을 과시했다. 윤 대통령 등 여권은 총선 참패 전까지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할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대외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상전벽해’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여야정 민생협의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쟁점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문 등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하는

# 나래코리아 & 전북벤처협회 콘서트

Hosted by

Narae Korea Opening Concert of

The 25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7:00

전주덕진예술회관

테너 류정필

소프라노 송난영

가야금 황정의

소리 서정근

피아노 김지연

앙상블 소리로

사회 설수진

주최 주관 나래코리아 후원 전주국제영화제